

직무급제 반대한다

임금피크제 폐지, 인력충원, 임금인상, 처우개선 하라

관련 기사 10, 11, 12면



조국 경찰 공방
'민주당 대 한국당'
진영논리의
유해함

3면

열악한 돌게이트
자회사
수납원 전원
직접 고용하라

10면

고 김용균 특조위가 밝힌
가막힌 발전소 현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강연

6~7면

금융 불안정,
부채 위기,
세계경제
또 위기 직면

4면

검찰 기소 위험
전교조 배아상헌 교사
성평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억압

5면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

-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8면
- 철도 자회사 비정규직 10면
- 영어회화전문강사 11면

미국GM

파업파괴자(대체인력) 투입과 정부 협박에도 파업 지속

한국GM 노동자도 공동 투쟁해야

김준호

공장 폐쇄와 정리해고에 반대하고 임금·노동조건 회복을 요구하는 미국 GM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GM 사측은 2009년에 노동자들에게 신입사원 이중임금제, 임금 동결(사실상 삭감), 건강보험 보조금 삭감 등을 수용하면 해고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노동자들은 그 후 10년 동안 심각한 고용 불안정에 고통받아 왔다.

반면 당시 막대한 구제금융으로 회생한 GM은 2018년에만 118억 달러(14조 1450억 원)를 이익으로 거뒀다. 그런데도 임금 인상을 거부하고, 1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없애려 드는 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 것이다.

사측은 폐쇄된 공장들에서 일하는 비조합원·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 해고하는 대신 조합원 일자리는 보장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팽배하다. 사측이 약속하는 일자리는 신규 채용 형식이라 임금이 대폭 삭감되는 데다, 그조차도 4년 후어나 해고자 중 40퍼센트를 재고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2009년에 벌였던 공격의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목숨까지 위협하는 탄압

악랄한 GM 사측의 탄압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 19일에 미시건주(州) 플린트에서는 사측이 고용한 파업 파괴자가 차량을 몰고 피켓라인으로 돌진했다. 24일에는 오하이오주(州) 파마시(市)에서

용역강패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파업 노동자들에 총격을 가했다(다행히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사측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 중단 때문에 급성 질환을 앓던 조합원들이 병원을 못 가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파업 효과도 작지 않다. 투자은행 시티그룹은 이번 파업으로 GM의 손실액이 매일 5000만 달러(약 6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연대도 확대되고 있다. 파업 돌입 직후 미국 운수노조 ‘팀스터즈’ 조합원들이 GM 완성차 수송을 거부한 것에 이어,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은 파업 중인 GM 노동자들에 음식을 제공했고, 같은 전미자동차노조(UAW) 소속 지프·크라이슬러 조합원들은 GM 노동자들과 함께 피켓라인을 지켰다. 파업 초부터 연대를 표했던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도 피켓라인에 동참해 노동자들과 함께 시위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사측의] 요청이 있으면 연방정부가 직권중재에 나서겠다”고 으름장 놓았다. 이에 파업 중인 한 GM 조합원은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다. “외국 공장들을 미국으로 들여온다고 해서 [일자리 만들어 준다고 해서] 2016년 대선 때 트럼프에 투표했더니! 그 자는 대통령 자리를 부지하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한다.” 거센 반발에 밀린 백악관과 GM 사측은 직권중재는 논의된 바 없다며 손사래쳐야 했다.

트럼프와 달라 보이고 싶어 하는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은 GM 파업이 사



사진 출처 UAW2290

연대와 단결은 노동자의 힘을 배가시킨다 파업파괴자 투입 저지에 나선 미국 GM 노동자들

회적 쟁점이 되면서 저마다 입장을 내고 있다. 민주당 주류가 내세운 대선 후보 조셉 바이든은 22일 GM 노동자 집회에 모습을 드러내 “정부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GM을 구제금융했다. GM이 회생한 것은 여러분 덕”이라고 연설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을 찬양하는 척하며 자기 책임은 없는 양하는 것이다. GM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UAW에 양보교섭을 압박한 것은 바로 바이든 자신이 부통령이었을 때 민주당 버락 오바마 정부였다.

오랫동안 민주당과 유착해 있었고 이번 GM 파업 직전에 크라이슬러와 포드에서 양보교섭을 타결한 UAW 지

도부는, 현재 크라이슬러 사측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GM 파업 전날인 14일에 미 연방수사국 FBI는 UAW 지도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파업의 기세를 꺾으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UAW 지도부는 교섭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GM의 희생 강요에 맞서 한국 GM 노동자도 동시 파업 중

이런 상황에서 GM 기층 노동자들이 보이는 투쟁 열기에 고무된 다른 노동자들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미국 제약회사 카이저퍼머넌트 노동자

약 8만 3000명이 외주화 반대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10월 초 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단사 노동자 파업으로는 최근 몇 년간 최대 규모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의 행동에 지지를 보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비조합원 노동자 절반 가량이 노조의 파업 행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같은 조사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10년 사이에 48퍼센트에서 68퍼센트로 올랐다.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싸우면 지지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때맞춰 한국GM 노동자들도 파업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고용 안정, 분할 기업의 단협 체결 등을 요구하며 추석 연휴 직전 사흘간 전면 파업을 한 데 이어, 지난 20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해 이번주 내내 6시간 파업을 진행 중이다. GM이 오랫동안 물량 이전 등을 미끼로 세계 각지 공장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온 역사에 비춰 볼 때, 한국GM 노동자들이 동시에 파업에 나선 것은 좋은 일이다. GM 사측은 동시 파업의 섶을 꺾으려 후속 신차 물량 배정 등을 미끼로 한·미 노동자를 이간질하려 들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GM을 압박하는 이때, 한국GM 노동자들도 미국 GM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때 사측에게서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로 미국·한국 모두에서 GM의 공격과 이간질 시도에 맞서 승리를 쟁취하길 바란다.

한국GM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을 다룬 본지 298호 기사 ‘한국GM 노동지도 파업 중 — GM의 희생 강요에 맞서 한·미 노동자 동시 파업도 함께 보시오.

건설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서

이주노동자 배척으로 일자리 지킬 수 없다. 외려 역효과

장우성

9월 19일 광주의 건설현장에서 한 건설 노동자가 고용 안정, 입단협 체결을 촉구하며 타워크레인 위에 올랐다. 이 노동자가 속한 건설노조 광주전남 지부는 형틀목공, 철근공 등 토목건축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는 전국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체들과 2017년부터 입단협을 맺어 왔다. 그런데 올해 사용자들은 전에 없이 불성실하게 입단협 교섭에 응하고 있다. 사용자 측은 주휴수당 지급 불가, 임금 동결, 포괄임금으로 시급제(2만 1000원) 전환과 같은 열토당토않은 안을 내놓고 있다.

사용자들이 이런 안을 고수하는 바람에 결국 9월 16일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은 종료됐다. 노동조합은 9월 18일부터 현장투쟁을 전개 중이다. 광주의 타워크레인 고공농성도 그 일환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공농성 중인

타워크레인에는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이라는 요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 요구에 대한 노동조합의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업체들은 외국인(이주노동자)을 불법고용해 저임금, 장시간·중노동을 강요함으로써 이윤을 쥐어짜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므로, 불법고용을 통한 불법다단계하도급을 근절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

사용자들이 이윤을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쥐어짤다는 것도, 불법다단계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도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을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분할 지배와 단결

자본주의 지배자들은 경제 위기 때마다 “이주민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거짓말을 퍼뜨려 왔다. ‘이주노동자가 사라지면 내국인 건설 노

동자들이 일자리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일부 건설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임금 하락을 압박하고 당장 눈앞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이주노동자 유입을 막으면 노동조건 하락을 막고 고용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물론 이주노동자 배척 행동으로 일부 사용자들이 ‘불법 고용’ 문제에 압박을 느껴 양보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일부 건설 현장에 국한되고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시안적인 대처다.

특히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한국 경제의 위기감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건설 경기 악화 가능성도 상당하다. 정부와 건설 사용자들은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억누르기 위한 시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해 온 건설노조에 대해 조합원 고용 기피, 노동

조합 활동 탄압과 같은 공격이 더 빈번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때 대형 건설 사용자들 처지에서는 일부 건설 현장에서 ‘내국인 우선 고용’을 양보해 손해를 보더라도, 건설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공격할 수 있으므로 더 이익이다.

반면 이주노동자 배척은 노동자들의 의식과 조직에는 상당히 해로운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이익과도 비교가안 될 만큼 큰 손해다.

한 건설 노동자의 지적처럼 “우리보다 약한 처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을 배척하면, 향후 우리가 공격받을 때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편에 서지 않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사이에 분열의 틈이 벌어지면, 다른 여러 지엽적인 차이들도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분열이 확대되면 건설 노동자들 전체의 힘과 조직은 약화돼, 사용자들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기는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런 협소하고 근시안적인 대처를 고수하기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고 건설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도 넓혀 나가는 것이 이로운 일이다. 이주노동자 배척 요구는 노조 조직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노조나 노동·사회 단체들의 연대를 건설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조건에 있는 다른 건설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착취받는 노동자들이고,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커다란 차별까지 겪고 있다. 즉 이들은 임금과 일자리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이 체제의 피해자들이다.

따라서 체제의 피해자들을 속죄양삼을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사용자에 맞서 투쟁해 모두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더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조건 하락 압박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조국 경질 공방

민주당 vs 한국당 식 진영논리가 해로운 이유

김문성

9월 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고 그 이튿날 조 장관의 아들을 소환 조사했다.

조만간 조 장관의 처 정경심 씨도 공개 소환될 듯하다. 구속영장 청구 얘기도 나온다. 올해 조 경찰이 덮은 버닝썬 사건도 검찰은 재조사를 하려 한다. 관련자 비호 경찰로 알려진 윤규근이 조국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경찰 간부였기 때문이다.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주가 조작과 횡령 혐의가, 자녀 특혜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

여권은 좁혀오는 수사망을 보며 연일 검찰을 비난·압박하고 있다. 9월 21일(토)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친문 진영이 대규모 검찰 규탄 집회를 열었다.(28일에도 예정) 이에 맞서 한국당도 장외집회와 연세 삭발로 맞불을 놓

고 있다.

두 당이 사생결단으로 대립하는 까닭은 이렇다. 첫째, 조국 사태가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의 전초전이 돼 버렸다. 둘째, 근본적으로 한국 지배계급이 처한 위기의 근원에 대해 두 당이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 위기에서 비롯하는 한국 경제 위기와 미·중 갈등 속에서 갈수록 심해지는 지정학적 불안정이 바로 그 근원이다. 설상가상으로 두 위기는 결합돼 있다. 한국 자본주의가 미국·일본·중국의 경제와 긴밀하게 통합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 국가(여야 간 의견차가 없다)가 군비 증강 예산 투입을 더 늘리려는 것도 이런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런 불안정성이 초당적·국가적 위기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프레임이 바로 민주당 vs 한국당의 진영논리다.



진영논리 때문에 노동자·청년들의 분노가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

부패세력 간 공방이 보여 주는 위선과 모순

20년 전인 1999년 김대중 정부의 “웃 로비” 등 권력형 부패 사건이 터지자 당시 좌파들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각각 ‘부패 원조’당, ‘부패 신장개입’당이라고 불렀다. 20년 지난 지금은 ‘부패 원로당’(한국당)과 ‘부패 중진당’(민주당) 정도 될 듯하다.

그래서 두 당의 공방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일 뿐이다. 희극처럼 보이는 이유다.

여권은 (문재인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권 교체와 적폐 청산의 영웅으로 떠받들었다. 윤석열은 박근혜·최순실 특검과 문재인 취임 후 서울지검장을 지내면서 구 여권 부패, 삼성 불법 승계 혐의, 사법 농단 수사 등을 지휘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를 주인을 무는 개 취급한다.

여권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었다면 마땅히 해야 할 수사를 비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내세운 “검찰 개혁” 명분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조국 수사는 안 되고, 조국 일가를 수사하는 검사들

을 수사할 공수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정권 보위용 기관일 뿐이다. 권력기관을 약화시킨다는 ‘검찰 개혁’은 그저 ‘공수표’인 것이다.(검찰이 정권에서 독립해도 문제, 종속해도 문제인 것은 검찰의 억압기구 성격 때문이다. 둘 다 대안이 되지 못한다. 지난 호 ‘검찰은 개혁될 수 없다’를 보시오.)

이처럼 여권과 윤석열의 밀월관계가 끝난 듯 보이자, 이 틈을 타 우파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압권은 최순실이 JTBC 손석희 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다. “자신은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부패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삭발을 했다. 박근혜 탄핵 때도 하지 않은 삭발이다. 이 자리에 딸의 부정 취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같은 당 의원 김성태가 참석해 응원했다.

황교안과 함께 장외 집회를 주도하는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은 아들의 대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의혹에 대해 “내 아들은 공부를 잘했다”며 빠져 나가려 한다.



이때다 싶어 목소리를 높이는 한국당에 속지 말아야 한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정의당 탈당 시도 해프닝은 정의당의 현재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듯하다. 정의당은 몇 달 만에 바른미래당에 지지율이 역전당했다. 노동자·청년 당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표출됐다.

그런데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들을 대변하지 않고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지지했다.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상정 당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진보적 개혁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여전히 보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다음을 보여 줄 뿐이다. 첫째, 정의당이 바라는 개혁 목표 자체가 너무 온건하다. 둘째,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 등을 위해 민주당과 너무 유착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결코 친노동 정부가 아니다. 의료 민영화/영리화, 기업인들의 임금비용 절감을 위한 노동개혁, 차별을 유지하는 가짜 정규직화 등 우파 정부의 적폐들을 다 계승하며 사용자 친화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경제·안보 불안 속에서 지배계급에게서 위기 관리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처지를 보여 준다. 심지어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민주당이 개혁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지지층을 설득하는 것 자체가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허황한 기대를 품게 만들어 노동자들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노동자 대중이 수동적으로 문재인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자칫 나중에 노동자들이 환멸을 느끼고 사기 저하될 수 있다.

결국 지금 진영논리로 나타나고 있는 정의당 지도부의 실용주의/현실론(비판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종류가 아니고 근시안적인 종류)은 정의당의 총선 득표 신장이라는 단기 목표를 위해 선거보다 비할 데 없이 중요한 노동계급의 의식과 자체 활동, 대중 투쟁 고무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자본주의가 처한 난관이 진보적 개혁을 필요하게 만들면서도 어렵게 만든다는 아이러니가 진영

논리를 강화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민주당 정부의 온건한 개혁조차 좌절돼 한국당이 재집권한다면 군소 정당인 진보 정당이 개혁은커녕 집권이라도 이룰 수 있겠느냐는 조야한 논리가 진영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재집권하면 이명박근혜 9년보다 더한 후퇴가 올 것이라고 진보 계열 대중을 협박한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9년은 왜 찾아왔을까? 바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진보 계열 배신이 낳은 환멸의 결과였다.

진영론과 차악론을 벗어나는 게 군소정당인 정의당과 민중당에게는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그러나 근시안적 ‘현실론’은 악순환을 해결하지 못한다. 진정한 대안의 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지금 진영논리는 진보정당이 자기 지지층인 노동자 등 차별받는 대중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또한 개혁의 진정한 동력인 대중 투쟁(이를 통한 의식과 조직)을 약화시킬 뿐이다. 정의당에서 “과감한 전환, 민주적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양경규 전 공공연맹 위원장 측의 침묵이 아쉬운 대목이다. 이는 자신들을 지지한 비교적 좌파 청년당원들의 당 지도부에 대한 항의가 반향을 확대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때늦은 후회?

2000년대 중엽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부의 인기가 떨어질 때 함께 지지율이 하락했다. 노무현 정부가 잘 됐어 야 민노당도 잘 됐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 반대다.

민노당은 노동계급을 일관되게 대변해, 노무현과는 다른 진정한 진보·좌파적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어야 했다. 그러지 못한 결과, 노무현의 배신에 대한 환멸이 진보정당 지지로 옮겨오지 않고 오히려 진보적 변화에 대한 환멸로 이어져 노무현과 동반 하락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뒤늦게 이를 깨닫고 부랴부랴 노무현 퇴진 요구를

채택하고 한미FTA 반대 투쟁, (대선 직전에는) 반(反)노무현·반(反)우파 민중총궐기 등을 벌였으나 이미 기울어진 세력균형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이명박으로 정권이 바뀐 뒤에 진보 정당들이 민주당과의 “전략적 야권연대”(계급을 초월한 국민연합) 노선으로 다시 기운 것이다. 심상정 대표도 이런 과거에 큰 책임이 있다. 이런 과거에서는 민중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심 대표와 민중당은 둘 다 전략적 야권연대에 적극적으로었던 나머지, 친노 유시민과의 통합(“통합진보당”)을 실행했다.

지금 민중당은 지지층을 의식해 좀 더 모호하게 말하고 있다. 가령 민중당 이상규 대표는 9월 18일 철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권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노동자·농민·서민을 외면할 때 그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나 정작 조국 임명 국면에서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워 사실상 문재인을 지지했다. “검찰의 칼날에 조국 후보자의 운명이 걸려 있는 형국... 검찰 개혁은 촛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검찰이야말로 적폐세력의 몸통이다.”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의 지지를 합계가 줄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합친 지지율 합계가 늘어나는 것은 다소 불길하다. 촛불 운동과 정권 교체 이후 크게 성장한 개혁주의적 정서(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정서) 자체가 후퇴하는 조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 그 방향으로 굳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시계가 불투명한 만만찮은 상황이 시작되는 조짐이다. 경제·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혼란과 반동이 촛불 운동의 여파를 갉아먹는 지금, 노동계급은 진영논리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더 급진적인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 당장은 아무 효과를 못 낼지라도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그동안의 지긋지긋한 친자본주의 양당 구도에서 벗어나게 도와줄 것이다.

금융 불안정, 부채 위기: 세계경제 또 위기 직면

이정구

최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의 손실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 상품의 손실이 얼마인지,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등이 부각됐지만, 더 중요한 점은 손실의 원인이다.

문제가 된 상품은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의 금리가 안정권 내에 있으면 고수익을 보장하지만 예상 범위를 넘어 서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그러면 왜 선진국 경제의 금리가 예상을 벗어났을까?

9월 17일에는 미국에서 금융회사끼리 주고 받는 하루짜리 자금 금리가 10퍼센트로 뛰어오르는 일이 벌어졌다. 보통은 2~2.25퍼센트 수준인데 거래 시작 10분 만에 10퍼센트로 뛰었다. 중앙은행인 뉴욕연방준비제도가 약 63조 원가량을 긴급 투입하면서 진정이 났지만, 이는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

최근 장단기 국제 수익률이 역전되는 현상을 두고서도 전 세계 금융계는 불안감을 나타냈다.

채권시장에서는 보통 장기 채권(국제 포함)의 수익률이 단기보다 더 높다. 왜냐하면 기간이 길수록 빌려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가 침체해 있고 미래 전망도 불투명하면, 장기 국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단기 국제 금리보다도 낮아지는 경우가 벌어진다.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돈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일본·독일 같은 국가들의 국제로 몰리면서 장기 국제 가격이 치솟는 것(금리 하락)이다. 그래서 장단기 수익률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미국의 국제 수익률 역전 현상이 벌어진 7번 중 6번에서 1년 이내에 심각한 불황이 나타났다. JP모건의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가 1년 이내에 심각한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40~60퍼센트라고 주장했다.

실물 경제 침체

이런 금융 불안정성의 이면에는 실물 경제의 여전한 침체가 있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위기를 진정시키려고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양적완화 등으로 금융권에 자금을 공급했다.

그럼에도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는 못했다. 이윤율이 매우 낮으면 금리를

하락하고 있는 세계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 50을 기준으로 높으면 경기 확장을, 낮으면 경기 수축을 나타낸다



출처 Market Economics

낮춰도 투자가 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성장을 전망치들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9월 19일 OECD가 경제전망을 발표했는데, 선진국 중 경제 상황이 가장 좋다는 미국도 2.3퍼센트 성장에 머물 전망이다. 이것은 지난 5월 전망보다 0.4퍼센트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OECD는 내년 성장률은 더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선진국이나 신흥국 경제들은 미국보다 더 못하다. 그나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온 중국 경제도 세계경제의 침체와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30년 만에 최저치인 6.1퍼센트 성장을 예상했다.

최근 중국 총리 리커창은 “중국 경제가 계속 6퍼센트 이상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해 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다. 산업생산과 고용 등을 확대하는 투자는 수익률(즉 이윤율)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최근 세계 산업생산과 국내총생산 그리고 세계무역량 등의 실물 경제 지표가 하락하는 것은 투자가 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JP모건 조사를 보면, 세계 투자 증가율은 1퍼센트대로 하락했다. 향후 몇 분기 내에 전 세계 투자가 정체하거나 감소한다면 세계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5퍼센트로 주저앉을 것이다.(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2.9퍼센트, 내년에는 3.0퍼센트로 예상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이렇게 지적했다.

“장기불황이 끝났음에도 주요 경제에서 자본 수익율이 2006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 투자 증가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주요 경제의 기업 이윤도 정체돼 있다. 세계 최대의 자본주의 경제인 미국에서 금융부문을 제외한 기업 이윤은 오랜 동안 하락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신문 헤드라인에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의 엄청난 이윤에 대해 읽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피라미드의 최상층에 있는 예외들이다. 바로 그 아래로 내려가면 많은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줄이고 저임금 또는 임시직이거나 파트타임 노동자들을 더 많이 고용함으로써 간신히 이윤을 얻고 있다.”

즉, 낮은 이윤율이 투자의 감소를 낳고, 투자의 감소가 또 다른 불황과 고용 부진을 낳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같은 정책을 추진하지도 못했는데, 설사 했다 하더라도 경제를 회복시키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임금 인상 등의 경기부양책은 경제 성장률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킬 수는 있어도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채 위기

게다가 저금리와 양적완화로 풀린 자금이 낮은 이윤율 때문에 생산 부문으로 가지 않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갔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다우지수가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는 이유다.

그러나 금융 부문은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서 수익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면 거품은 지속되기 힘들다. 최근 파생결합펀드 사태도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불황이 온다면 주요 국가들이 저금리 정책과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면서 남긴 엄청난 부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전 세계 부채는 2016년 이후 2년간 약 27조 달러 증가한 244조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GDP의 318퍼센트다. 전 세계 비금융부문 기업 부채는 73조 달러(GDP 대비 92퍼센트)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금융부문 부채는 2008년 대비 10퍼센트 증가한 60조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가계 부채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

다.

G20 중 일본 국가의 부채가 GDP 대비 234퍼센트로 가장 높다. 아베 정부는 국가 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소비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런 조치는 소비를 감소시켜 경제를 더 심각한 불황에 빠뜨릴 수 있다.

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중국이다. 중국은 그림자 금융과 부동산 거품 때문에 총부채가 317퍼센트에 이르렀고, 정부·지방정부·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도 250퍼센트 정도다.

그런데 저금리 때문에 더 증가한 부채가 큰 부담이 되지 않았지만 좀비 기업들이 파산하고 신흥국 중 일부 국가들이 디폴트를 선언하면 부채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고 금융 부문은 악성 부채로 인한 수익성 위기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향후 세계경제는 2008년의 세계경제 위기와 그리스의 디폴트 위기 같은 일들이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전쟁뿐 아니라 주요 국가들에 대해 관세장벽을 높이므로써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여기에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를 가파르게 위기로 내몰고 이것이 세계경제를 벼랑으로 내몰 수 있다.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경제도 당분간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불황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일부 지역에서 정치적 격변을 초래할 것이다.



검찰 기소 위험 배이상헌 교사

성평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억압 문제다

정진희

9월 23일, 광주 남부경찰서가 도덕 교과 시간에 성평등 교육을 했을 뿐인 배이상헌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평등 교육을 성범죄라고 몰아세우는 광주시교육청이 자신들의 독단과 권위주의를 정당화하고자 끌어들이는 억압 기구들이 활성화돼 작용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프랑스 여성 감독이 제작하고 전교조 여성위 등 여러 여성단체들이 추천한 성인지 교육용 영상 〈억압받는 다수〉상영과 배이상헌 교사의 일부 발언을 실제 내용과 맥락에서 떼어내 ‘성 비위’로 경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당사자에게 구체적 혐의 내용을 알려 주지도 않았다.)

명백한 수업 활동, 그것도 성평등 교육을 아동복지법 상의 ‘성적 학대’ 행위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고 지독히 억압적이다. 일부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지만, 강압적 성적 행위와 무관하고 성차별적 혐의도 없는 수업의 내용이 어떻게 10년 이하의 징역과 교직 박탈까지 가능한 중범죄가 될 수 있는가!

경찰의 방침을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노출 장면이 포함된 단편영화를 틀어 준 것 자체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라고 한다. 성적 장면이 포함된 해당 영상을 남녀 혼합반에서 공개적으로 상영한 점 등이 일부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경찰이 판단했다고 한다.

현 사회의 남녀 구도를 뒤바꿔 보여 줘서 여성 차별의 현실을 고민해 보게 하려는 영화의 취지와 무관하게, 편협함과 심한 편견으로 그저 노출 여부만 따져 수업을 범죄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성에 대해서는 무엇이건 말해선 안 되고, 남녀가 함께한 자리에서는 성 교육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부패한 검경의 적반하장 단죄

부패한 억압 기구인 경찰과 검찰이 청소년들에게 금욕주의를 강요하는 억압적인 관행을 계속 유지하려 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검경은 진보 교사의 성평등 교육을 단죄할 자격이 없다. 부유층이 고액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의 범죄를 비호한 게 경찰과 검찰이었고, 조국 민정수석 하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한 윤규근 총경도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자를 비롯해 처벌된 경찰과 검찰 인사들은 거의 없다. 수사기관이 성인지 교육용 영상을 문제 삼아 성평등과 학생 인권 교육에 30년 넘게 헌신해 온 양식있는 교사를 형사 처벌하려는 것이 더욱 역겨운 이유다.

성범죄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분간하지 않고 무조건 수사 의뢰한 교육부



성평등 교육을 억압하는 광주시교육청에 항의하는 시위가 9월 25일에도 열렸다

방침은 스쿨미투의 취지를 왜곡하고 되레 성평등 교육을 위축시킨다. 또한 교육청의 독단주의와 학교 관리자들의 보신주의를 더 부추기고 있다. 진보 교육감을 자처하면서도 부당하게 진보 교사의 교육 활동을 탄압하며 검경에 넘긴 장휘국 교육감은 수구적 국가관료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보호’ 운운하며 배이상헌 교사 방어 운동을 스쿨미투에 대한 보수적 반격으로 곡해해 왔다. 일부 여성단체들과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배이상헌 교사의 행동이 스쿨미투의 성과를 무로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 여성위 일부도 이런 견해에 동조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여성 다수의 견해가 아니고 심지어 전교조 여성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조차 되지 못한다. 오히려 상당수 여성위원들이 배이상헌 교사를 변호하며 광주시교육청 방침을 비판하고 있다.

물론 스쿨미투에서 제기된 많은 사건들은 실질적인 학생 피해를 담고 있다.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겪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경우도 많다. 학생들의 정당한 항의 목소리가 무시될까 우려하는 정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진술을 진중하게 다뤄야 하지만, 이것이 곧 학생 진술을 절대시하는 것이 돼서는 곤란하다. 각 사안의 사실관계와 맥락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이것은 교사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일이다. 교육청이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없이 민원만으로 성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넘긴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되돌리기 힘들다. 면밀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통해, 처벌해야 할 문제와 교육이나 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을 구별해야 한다.

심각한 성범죄는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수업 시간의 교사 발언을

강간이나 성추행 등의 강압적인 성적 행위와 동격으로 다루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리 되면 이번 사건처럼 비하나 차별의 혐의가 없는 발언이나 영상 상영도 오해나 곡해에 의해 성희롱, 심지어 “성폭력”으로 취급받게 된다.

물론 교사의 수업 발언 중에도 학생들이 듣기 괴로운 부적절한 발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구체적 내용과 맥락을 따져서 그 특성(고의성, 지속성 등)에 걸맞은 조처가 이뤄져야지, 무조건 수사와 처벌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가기구로서 교육청의 권위주의적 대책은 학교에 성평등이 확산되게 만들기보다 불필요한 갈등을 자아내며 학교 현장을 더 황폐하게 하고 있다. 교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9월 21일 전교조 주최 스쿨미투 토론회에서 여성정책연구원의 박선영 선임연구원은 교육부의 신고의무제와 엄벌주의를 비판했다. 심각한 성범죄도 아닌 사건들이 중범죄로 취급되며 대거 사법처리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교조 조합원들에게는 제법 알려졌다듯이, 이 토론회 자체는 전교조 지도부가 자기 조합원인 배이상헌 교사 방어를 회피하고, 애초 약속과 다른 주제와 패널로 개칭한 면피성 토론회였다.)

스쿨미투를 지지하며 이 토론회에 참가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교육 당국의 처벌 위주 대응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청소년 활동가는 “교육청은 교사도 학생도 보호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만을 보호할 뿐이다” 하고 일갈했다. 또 다른 청소년 활동가도 스쿨미투의 정당성을 밝히면서도, 여러 문제들이 혼재된 복잡한 상황을 엄벌주의로 대처하는 당국의 방침에 비판적 의견을 나타냈다. 배이상헌 교사의 처벌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밝혔다.

확산되는 배이상헌 교사 옹호 목소리

이번 사건으로 많은 교사들이 심리적 부담을 토로하며 성(평등) 교육에 열의를 잃고 있다는 얘기들이 전교조 교사들에게서 많이 나오고 있다. 성교육을 하다 민원에 시달리며 부당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사례가 다반사이지만, 이번처럼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인 장휘국 교육감이 성평등 교육에 오랫동안 헌신해 온 전교조 교사를 성범죄자로 낙인 찍으며 수사 의뢰한 상황이 특히 충격을 주고 있다.

동시에, 배이상헌 교사 방어를 회피하는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미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참가자 약 80퍼센트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 서명에 동참했고, 서명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기층의 압력이 커지자 9월 24일, 전교조 지도부는 사건 발생 70여 일 만에 성명을 냈다. 하지만 정작 당면 핵심 문제는 회피했다. 배이상헌 교사 방어 없이, 교육부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성비위 심의 기구를 교육청에 마련하라는 내용에 그쳤다. 생색일뿐더러 이번 사태를 초래한 광주시교육청의 책임도 묻지 않았다.

물론 교육부 매뉴얼과 신고의무제 등 여러 문제점들은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안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 전교조가 구체적인 조합원 방어 문제를 회피한 일반적 성명서를 낸 것은 그간의 무책임한 회피를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배이상헌 교사 방어 문제를 연단에서 다루지 못하게 한 9월 21일 전교조 토론회처럼 지도부의 면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교조 지도부는 더는 회피하지 말고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당장 나서야 한다.

배이상헌 교사를 지지하는 전교조 교사들은 대의원들의 압도적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지도부의 방침에 항의하며 전국의 전교조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 서명을 받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성평등 수업이 처벌받을 상황이라는 소식에 교사나 진보적 교육운동가들뿐 아니라 평범한 많은 사람들도 놀라고 분노하고 있다.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이 받는 서명에 1주일도 채 안 돼 1500명가량이 참가했다. 이 서명은 수사기관의 수사 중단과 광주시교육청의 직위 해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사안의 검찰 송치 소식을 보도한 연합뉴스 보도가 다음 포털에 오르자 4시간 만에 140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이 검찰 송치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기소의견이 터무니없고 교사들이 처벌의 위협 없이 수업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더 개방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교조 장효진 교사의 제안으로 〈억압받는 다수〉의 감독 엘레오노르 푸리아를 포함해 프랑스와 영국 등지의 교사와 진보적 활동가들이 배이상헌 교사를 방어하는 국제적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수업 검열과 처벌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국가의 성평등 교육 억압에 반대하는 배이상헌 교사 방어 운동에 지지를 제공하자.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의 간사가 말한다

김용균 특조위가 밝힌 위험의 외주화, 기막힌 발전소 현실

이 글은 민주노동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본부 사무장이자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의 간사인 **이태성 씨**가 앞서준2019 산업재해와 자본주의 — 일뿐만 안전 약속에 계속되는 고통 워크숍에서 연설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삽입한 것이다.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가] 앞으로 발전소가 죽음의 사업장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전기를 생산하는 노동 현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동지들과 함께 싸우고 결의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김용균 스물네 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정부는 특조위(특별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발전소가 왜 이렇게 죽음의 사업장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특조위 결과를 듣고 나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도 특조위원으로 참여해서 발전소 현장을 누구보다 빨리 알렸지만 그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심각한 트라우마까지 겪게 됐는데요, 그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절차 지켜서 죽었다”

2018년 12월 10일 밤 10시 40분경에 스물네 살 청년 노동자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취급 설비인 컨베이어벨트에 머리와 몸이 분리돼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작업 지시 절차를 다 지켰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발전소에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김용균 씨 회사인 한국발전기술이 작성한 작업지침서를 보면] “유의사항: 벨트 및 회전기기 근접 작업 수행 중에는 비상정지되지 않도록 접근 금지.” 벨트가 서지 않도록, 비상 정지가 되지 않도록 낙안이나 설비를 잘 점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절차를 고(故) 김용균 노동자는 지켰습니다. 그가 일했던 작업 방식 모습입니다(아래 사진).

그런데 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발전소 설비는 원청인 발전사 소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가 아무리 개선 요청을 하더라도, 원청이 그것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습니다. 원-하청의 위계 구조 때문입니다(오른쪽 표).

[발전소의] 소유와 운영이 분리돼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는 설비 운영권리는 없고 의무만 강요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개선을 요청하더라도 무시되기 일쑤였습니다. 비용 절

고 해법치기” 하는 구조입니다.

[발전 협력사의 계약서상] 김용균 노동자의 월급 설계는 436만 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야간 연장근로를 하고도 212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회사의 인건비 지급 내역을 다 확인해 본 결과, 52퍼센트에서 38퍼센트까지 착복했습니다. 심지어 노무비 계약금액이 62억 원인데 실제 인건비 지급률은 30억 원밖에 안 되고 착복액이 32억 원입니다.

감 때문에,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발전사가] 하나가 아니라 다섯 개로 분사됐고,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정비 업무가] 민간기업에 외주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업무의] 사업주가 변경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원청인 발전사와 하청인 협력사는 서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효율성’ 착취의 다른 말일 뿐

그러면 발전소의 여러 업무가 왜 [민간기업에] 외주화됐는지 그 실체를 보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입찰의 원칙 [아래에] 시장의 효율성이나 안정성을 제고하고 최적의 경쟁 도입 방안을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다 허상이었습니다.

발전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1000메가와트 단위의 대용량 발전소, 500메가와트의 중력발전소, 200메가와트의 소형 발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 제도를 완화했습니다. [예초에는] 500메가와트 기력설비 실적 보유업체만 1000메가와트급 공사에 참가 가능했지만, 입찰공고에 참가 자격을 200메가 이상 공사실적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에게 무방비 상태로 발전소 설비를 점검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발전소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간업체가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데 입찰 기준이 너무 높아져 완화했다.” 사실상 경험 없는 회사들에게 발전소 설비를 운전하게 만들고 정비하게 만든 것입니다.

발전사가 하청업체에 제공하는 인건비도급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시중 단가를 적용해서 노무비가 계속 올랐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노무비]는 그대로 민간회사의 배영업이익을 불리는 것으로 갔습니다. 민간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19퍼센트, 17퍼센트, 16퍼센트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상장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진 않죠. 2018년 12월 10일 밤 10시 40분경에 스물네 살 청년 노동자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취급 설비인 컨베이어벨트에 머리와 몸이 분리돼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작업 지시 절차를 다 지켰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가 일했던 작업 방식 모습입니다(아래 사진).

[발전 협력사의 계약서상] 김용균 노동자의 월급 설계는 436만 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야간 연장근로를 하고도 212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회사의 인건비 지급 내역을 다 확인해 본 결과, 52퍼센트에서 38퍼센트까지 착복했습니다. 심지어 노무비 계약금액이 62억 원인데 실제 인건비 지급률은 30억 원밖에 안 되고 착복액이 32억 원입니다.



심지어 이중 착복까지 일어났습니다. 발전소에는 발전소 설비들을 1년에 1번씩 1달 정도 세워 놓고 경장정비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 있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에방정비라고 하는데, 이때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은 1명입니다. 그러나 [하청업체] 지급되는 인건비는 2건 [경장 정비, 계획에방정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입된 1명의 인건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 착복했습니다.

발전소가 분할되면서 석탄 도입 단가도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발전소의 연료비 90퍼센트 이상이 경쟁입찰로 적용이 됩니다. 발전사는 석탄연료를 다 운시켜서만 비용을 줄여 영업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석탄 가격을 글로벌 도입 단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전사는 [글로벌 도입 단가보다] 훨씬 더 높게 구입합니다. 석탄 발전사들끼리 경쟁하면서 도입 단가가 더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에 무분별 노출

그러면 그간 외주화되고 민간에 개방되는 과정에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런 특조위 조사에서] 발전소에서 결정형유리규산이 기준치의 8배에서 많게는 16배까지 측정됐습니다. 결정형유리규산은 석면과 똑같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조위 조사 전에는] 작업현장에서 측정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러나 발전사는 발전소 노동자들이 취급하는 석탄과 그 재에 1급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한테 이것을 알리지 않았던 거죠, 하청 노동자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발전소에] 석탄을 아작하는 장소 금할 겁니다. 보통 6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상청회사도 6퍼센트인데 발전사 협력사인 정비업체들은 영업이익이 세 배, 네 배 더 높습니다.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구조입니다.

[발전 협력사의 계약서상] 김용균 노동자의 월급 설계는 436만 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야간 연장근로를 하고도 212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회사의 인건비 지급 내역을 다 확인해 본 결과, 52퍼센트에서 38퍼센트까지 착복했습니다. 심지어 노무비 계약금액이 62억 원인데 실제 인건비 지급률은 30억 원밖에 안 되고 착복액이 32억 원입니다.



김용균 특조위의 직접고용 권고 즉각 이행하라 8월 31일 발전 비정규직 총력 투쟁 결의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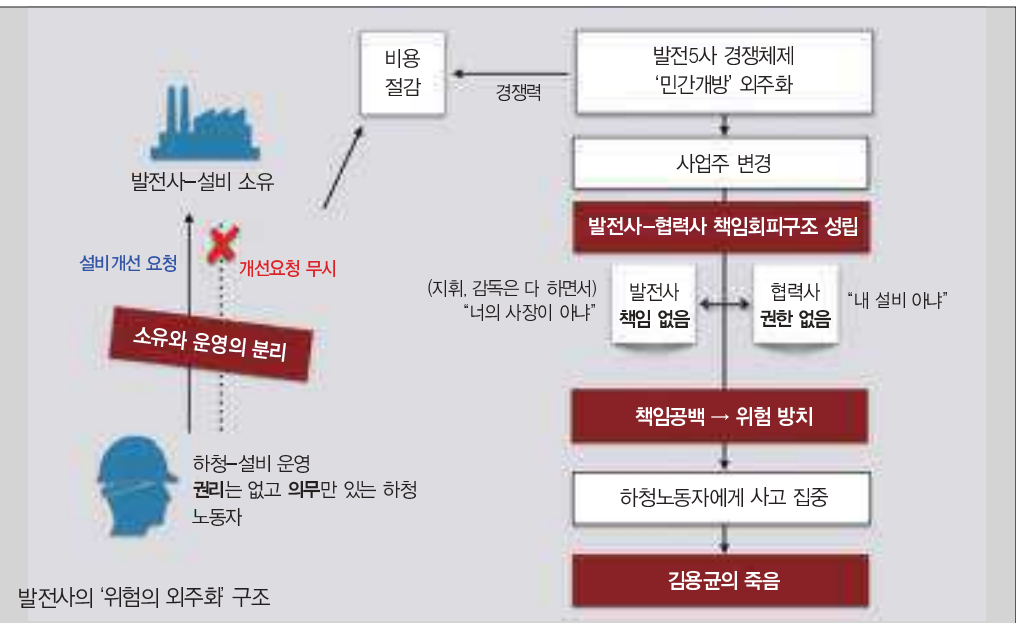
현도를 보면, 협력업체는 원청보다 무려 9배나 높습니다. 또한 발전사가 최근에 청소나 시설·경비 업무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했는데, 청소 노동자들도 심지어 7배가 높아요, 2016년 당진화력 발전소에서 3명이 사망한 경우처럼, 원청이 하청·재하청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다단계로 내려갔을 때 소통이 안 되면서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또 주목한 것은 김용균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산업재해가 은폐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1건의 산재 사고가 발생했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6건이 은폐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조위 조사 전에는] 작업현장에서 측정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러나 발전사는 발전소 노동자들이 취급하는 석탄과 그 재에 1급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한테 이것을 알리지 않았던 거죠, 하청 노동자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발전소에] 석탄을 아작하는 장소 금할 겁니다. 보통 6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상청회사도 6퍼센트인데 발전사 협력사인 정비업체들은 영업이익이 세 배, 네 배 더 높습니다.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구조입니다.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외주화 구조가 산재의 원인

이번 특조위 결과를 통해 작업 관련 손상에서 유의미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의 산업 재해에서 특별한 불안정한 행동이나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 작업자에게 손상이 간다는 것이 통념이었는데, 이번에 원-하청 간 직접 지시에 의해서 작업자가 다치고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특조위가 설문조



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타사 관리자가 업무지시를 하게 되면 5년 미만자, 미숙련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다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원청 관리자가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허가서가 없는데도 밀폐 공간에 그냥 들어가서 일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사고가 나고 다칠 수밖에 없는 거죠.

특조위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연료·환경 설비 운전 업무는 각 발전사로 통합 운영하고, 해당 노동자(간접인력 포함)를 직접고용한다. 경장정비 업무는 한전KPS로 제공영화하고, 이에 따라 민간정비회사 소속 노동자를 한전KPS가 직접고용한다.” 한전KPS는 [발전소]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직접고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위계나 차별 없이 동일한 직책으로 편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여당 대표가 ‘죽음의 외주화’를 근절한다고 약속했지만, 현상이 그대로면, 현장의 실

질적 위계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발전소 현장에선 여전히 기계가 돌아가는 속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항의해 계속 싸울 것

이제 우리 노동자가 바뀌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8월 20일 한국노총과 민주노동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같이 싸우기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서 반드시 이 죽음의 사업장, 발전소를 바꾸자고 투쟁 결의를 했습니다. 8월 31일 우리는 청와대로 갑니다. 우리가 [사고로] 죽지 않고, [1급 발암물질에] 서서히 죽어가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당당히 싸울 것입니다. 김용균 사고 이후, 한국 사회의 전환점이 되고, 정말 내 노동이 존중받고, 내 노동이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여기 계신 동지들과 함께 꼭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녹취 유나연 / 정리 신정환

문재인 정부, 직접고용 권고 거부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설립된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8월 19일 권고안 22개를 발표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중에서도 특히 직접고용 권고를 핵심이라고 여긴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특조위 권고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다. 2월 5일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하여 발표한 김용균 사망 대책 이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장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공공기관을 따로 만들어 고용하고, 경장정비 분야는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논의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다. 9월 19일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노사전협의체 노동자 대표단과 민주당·발전산업 안전강화·고용안전 TF의 위원회·최인호 국회의원이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공기관 설립안은 비정규직을 한전 또는 발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

고 정비 분야의 정규직 전환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심지어 이 미흡한 당장 발표조차 사측과 한국노총 소속 정규직 노조의 방해로 8개월이 지나도록 전진이 없다. 2인 1조를 위한 인원 충원과 삭감 없는 노무비 지급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김용균 씨 사고 이전인 지난해 초부터 이미 모든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김용균 씨의 끔찍한 죽음 이후에도 직접고용 책임을 회피하면서, 안전과 처우 개선 관련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말만 늘어놓고 있다.

직접고용을 요구하기 단호한 투쟁을 이어 가는 틀게이트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파탄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조국 사퇴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졌다. 지금의 상황이 투쟁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은 이유다.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투쟁을 굳건하게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신정환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오히려 민간 석탄발전소 늘리는 중

김승주

발전 공기업 5사가 노후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정부가 2017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이라며 유도해 온 방향이다.

이에 따라 석탄 화력 발전소인 삼천포 1~4호기, 호남 1·2호기, 보령 1·2호기, 태안 1~4호기, 당진 1~4호기 등이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거나 LNG 발전소로 전환할 예정이다. 문재인은 9월 23일 유엔총회에서도 이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탄소 배출량 감축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노후 석탄 발전소 폐쇄와 동시에 대형 석탄 발전소 7기를 새로 짓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발전소들은 노후 발전소보다 1기 당 용량이 최대 8배까지 더 크다. 결국 더하고 빼면 2022년 화력 발전 용량은 지금에 걸친 줄어들기엔 늘어난다. 그에 따라 예상되는 미세먼지 배출 총량도 700여 톤 가까이 늘어난다.

제2의 김용균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의 간사이자 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본부 사무처장인 이태성 씨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강행하려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회사 고용 방안은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화력 발전소들이 폐쇄된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자회사로 고용되면 향후 경영상의 이유로 자회사를 없애고 해고하면 끝이다. 자회사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한전이 5개 발전 자회사로 분할된 현 상황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된 발전 민영화의 결과다. 잘게 쪼개서 사기업에 팔아 넘기기 좋게끔 하고 공기업 자회사끼리 경쟁하게 만들어 비용을 절감하려는 시도였다. 2002년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 등에 때때로 가로막히거나 속도가 늦춰지긴 했지만, 역대 정부들의 민영화 시도와 외주화 확대는 계속됐다. 노동자들의 처지는 악화됐고 비용 절감 논리가 더 철저하게 관철됐다.

고(故) 김용균 노동자를 끔찍한 죽음으로 몰고간 ‘위험의 외주화’는 이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민간 화력 발전소 확대는 ‘김용균 사망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무시하는 것이고, 제2의 김용균을 낳을 개악이자 문재인 정부의 또다른 촛불 배신이다.

미세먼지와 환경 오염에 진짜 책임이 있는 민간 자본가들에게는 화력 발전소 건설 기회를 제공해 돈벌이를 하게 하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화력 발전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떨게 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고용 불안

폐쇄·전환 예정인 석탄 발전소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직면했다. 정부는 폐쇄되는 석탄발전소의 노동자들의 고용을 타기업으로 전환해 보장하



신정환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 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대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헌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9월 24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동안 국립대병원 사용자들은 자회사 방안을 강요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4차 공동파업

“서울대병원 따르겠다”더니 자회사 고집하는 국립대병원들

9월 30일 민주노총 소속 산별연맹 3곳(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차 공동파업에 나선다. 이 노동자들은 9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대병원·부산대병원 등에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9월 20일부터 로비 농성에 돌입했고, 10월 중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9월 3일 서울대병원의 직접고용 합의 이후에도 지방 국립대병원 사용자들은 정규직화를 회피하고 시간만 끌고 있다. 이전에는 “서울대병원이 정규직 전환하는 걸 보면서 전환하겠다”더니 정작 서울대병원이 직접고용을 약속하자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지방 국립대병원 사용자들은 “우리는 서울대병원과 다르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직접고용하기 어렵다” 하며 버티고 있다. 자회사로 전환하면 정부가 이드라인보다 나은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는 둥, 직접고용 하면 정년을 지금처럼 인정하기 어렵다는 둥 뻔한 회유와 협박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직접고용 합의 소식을 받으며 그것이 다른 국립대병원들에도 적용되리라 기대했던 노동자들은 여전히 자회사를 고집하는 사측의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교육부는 조국 임명 파동으로 위기에 몰리던 상황에서 서울대병원 노동

자들의 투쟁에 밀려 일부 양보했지만 또다시 뒷걸 지고 물러나 있다. 국립대병원 사용자들은 이를 명분삼아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직접고용하라는 공문 한 장만 보내 주면 당장이라도 직접고용하겠다”며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노동자들은 피 말리는 희망고문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측의 시간끌기와 자회사 담합을 이번에 끝내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파업을 결의했다.

직접고용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성과를 거둔 비결은 유리한 정세에서 단호하게 파업해 주먹을 끌었던 것, 무엇보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더해졌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3개 산별연맹 공동투쟁에 걸맞게 다른 병원에서도 직접고용 합의가 될 때까지 함께 싸웠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조국 임명을 둘러싼 정부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는커녕 청와대와 검찰 등 국가 권력 내부의 투쟁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기회에 투쟁을 발전시켜 직접고용 성과를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단단히 연대 투쟁을 유지해 공동투쟁의 정치적 효과를 이어 가야 한다. 또, 국립대병원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단협 등이 진행 중인 지금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를 강화하면 투쟁의 효과를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쟁취할 때까지 이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장호중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더욱 우경화하는 일본 지배자들

★ 북·미 정상회담 전망

★ 미국산 무기 구매 '큰손'이 되려는 문재인 정부

★ 김종대 의원 비판: 정의당은 F-35A 전투기 도입을 반대해야

★ “고용지표 회복” 발표는 사기: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위기

★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성명: 이주민 혐오 반대! 노동자 단결!

★ 2심 선고 앞둔 난민 루엔도 가족, 입국 허용하라

★ 책 소개
《커져버린 사소한 거짓말》: 소외와 차별, 한 아이의 거짓말이 낳은 나비효과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기금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시/군/구까지)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학교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9년 3월 30일 개정

전화 02-2271-2395 / 이메일 mail@workersolidarity.org



조삼모사식 보육 대책에 아이들과 부모, 보육교사들의 처지는 거의 나아지지 않고 있다

김미리 기자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 — 빛 좋은 개살구

전주현

문재인 정부가 '맞춤형 보육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보육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 보육체계는 내년 3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된다.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맞춤형 보육제도'는 홀벌이 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맞춤반), 맞벌이 가정의 자녀만 12시간 이용 가능하게 한(종일반) 차별적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모든 가정의 아이들이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을 받고, 오후 4시~저녁 7시 30분까지는 연장보육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은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한 시간까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로 "보육교사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민주당도 "자신이 죄인 같다는 위경맘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이 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아동의 온종일 돌봄이 가능"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자화자찬은 참말이 아니다.

우선, 기존의 차등 지원 체계를 계승하고 있다. 복지부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0~2세반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가 확인되어야 한다." 즉, 연장보육 신청에 자격 제한이 있는 셈이다. 그래서 '맞벌이 인증' 등을 요구하면, 도로 맞춤형 보육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으로 보육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처럼 호들갑 떠는 것도 과장된 얘기다.

연장보육 신청자가 5명 미만이면 정부는 어린이집에 전담교사 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구멍이 송송 뚫린 연장보육 방안

연장보육 전담교사 신규 채용도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최소 29만 명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2020년 보육 예산안을 보면, 월급이 111만 2000원에 불과한 4시간짜리 시간제 전담교사 12만 명만 신규채용 할 예정이다.

부족한 인력은 "담임교사의 연장근로나 보조교사의 전담교사 겸임"을 허용해 메울 계획이다. 심지어 어린이집 원장도 전담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열어 놨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신규 채용하기보다 기존 담임교사들에게 몇 톨의 수당을 쥐어주고 연장근무를 시키려 한다. 돈 벌이에 혈안이 된 원장들은 자신을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등록해 놓고 담임교사나 보조교사에게 연장보육을 떠넘기고 전담교사 지원비를 가로챌 수도 있다. 돈을 최대한 안 들이고 연장보육을 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술책이 이런 문제들을 양산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와 휴게시간 보장을 약속해 보육교사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새 보육체계 개편안은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

에 짓눌린 보육교사들의 고통을 줄여주지 못한다.

가령,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문구만 형식적으로 추가됐을 뿐 강제 조처는 없다. 갑질의 끝판왕인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자발적인 근로기준법 준수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복지부가 마련 중인 '대면보육 7시간+휴게시간 1시간+행정업무 1시간' 근무 방침도 문제적이다.

보통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7시간이나 돌보면 교사들은 진이 빠져 아무것도 못할 지경이 된다. 7시간 대면보육 이후, 1시간 만에 행정업무를 끝내라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보육교사들은 각종 일지 작성과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 서류몽치를 싸들고 집에 가서 나머지 업무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 없음

허울뿐인 1시간 휴게시간 제도는 보육교사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보육교사들은 안전 문제 때문에 한시도 교실에서 눈을 뗄 수 없다. 몇 분만 교실을 비워도 아동학대범 취급을 받는다. 그런데 교실을 맡아 줄 대체 교사도 없고, 독립적인 휴게 공간도 없는데 누가 마음 편히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지난해 보육교사 휴게시간이 의무화됐지만, 쉴 수 있는 실제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휴식은커녕 1시간 공짜 노동만 늘어난 셈이 됐다. 오죽하면 휴게시간을 없애라는 요구까지 나왔을까.



박지영 기자

누구의 삶이 달라졌나? 2018년 1월 24일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한 문재인

복지부는 시간제 보조교사를 늘렸다고 하지만, 전일제 보육교사의 근무조건 개선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조교사를 고용해도 업무 규정이 불명확해 원장들이 자신의 업무 보조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휴게시간 사용 내실화를 위해 교사 한 명이 두 개 반을 담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삼모사식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법적으로 교사 1인이 돌볼 수 있는 아동 수는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이다. 한 교사가 휴식하는 동안 동료 교사 혼자서 30~40명의 아이를 돌보라는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인가?

양질의 보육 확대와 거리가 멀다

종합해 보면,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은 번지르르한 말 포장과 달리 보육교사 처우 개선 요구를 반영하

지 않았다. 보육교사의 처우가 열악한데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등 지원에 기초한 연장보육 방안도 이전보다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안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며 더 나은 개선택을 요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돌봄 서비스 확대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사회서비스원 정책에서도 후퇴를 거듭해 개혁 염원을 배신한 바 있다.

보육예산 대폭 확대, 정규직 보육교사 대량 고용, 8시간 근무 연속2교대제, 교사 한 명당 아동 수 줄이기 등 보육의 질 개선에 진짜 효과가 있는 방안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정부 직영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고 양질의 보육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라고도 촉구해야 한다.

열악한 톨게이트 자회사 실체가 드러나다

톨게이트 수납원 전원 직접고용하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김천 도로공사를 점거한 지 벌써 3주차다.

도로공사는 “불법” 운운하며 점거를 비난하고 전기도 끊고, 기자 출입도 통제하며 노동자들을 고립시키려고 애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가 모이고 있다. 9월 23일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농성장 침탈시 파업, 톨게이트 투쟁 연대 기금 1억 모금 등을 결정했다.

곧 투쟁에 연대하기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도 출범할 예정이다.

“노사합의”?

도로공사는 여전히 막무가내다. 9월 23일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받은 300여 명에 대해 업무 배치를 위한 소집 절차를 강행했다. 300여 명과 나머지 투쟁 대열을 분열시키려는 수작이었다.

민주노총 소속 판결자들은 소집 절차에 집단적으로 거부했다. 아쉽게도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는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절차에 응하는 것을 허용했다.

한편 이강훈 도로공사 부사장은 투쟁을 비난하는 글을 <경향신문>에 기고했다. 그는 자회사 처우를 자랑하며 수납원 자회사 전환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합의 사항이라고 정당화했다.

그런데 그 “합의” 내용은 수납업무의 자회사 전환, 자회사 거부자는 대법원 판결 후 직접고용하더라도 조무직(청소, 도로정비 등) 부여, 대법원 판

결까지 한시적 기간제 채용이다. 9월 9일 이강래 사장이 발표한 기만적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구나 당시 민주노총이 합의를 거부했고 전문가위원들이 전원 퇴장했다.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조합원들은 “합의”에 반발하며 서명에 동참한 당시 위원장을 탄핵했다.

무엇보다 “합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자회사의 실상이 드러났다.

9월 18일 자회사 전환 노동자 일부는 인력부족과 그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를 폭로했다. 1500명이 해고된 자리에 800명만 기간제로 채용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임금 인상도 사실상 인원 축소로 인한 연장근무 증가에 따른 것이라 비판했다. 또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시 약속한 임금 인상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폭로했다.

이런 증언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와 투쟁이 완전히 정당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청와대와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톨게이트 투쟁이 초점이 되자 청와대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9월 말 타결을 목표로 노사 간 대화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은 “워낙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프레시안>). 그만큼 노사 입장 차이가 큰 상황임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들이 노동자들에게 만족

스러운 안을 가져올지 의심스럽다. 그간 소위 당·정·청은 이강래를 비판하기는커녕 자회사 강행을 돕거나 방조했다.

최근에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톨게이트 문제에 대한 정부 협의결과를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조국 임명 이후 입을 싹 씻으며 뒤통수를 쳤다. 이강래는 민주당의 어떠한 견제나 비판도 받지 않고 국회의원 출마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정규직화 투쟁에서 노동자들에게 불만족스러운 안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예컨대 LG유플러스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투쟁에서 이들은 부분 자회사 방안을 중재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감스럽게도 최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양보 압박에 가세했다. 그는 도로공사 본사를 찾아 한국노총 소속 요금수납원과 정규직 노조, 이강래 사장을 만난 후, 모두에게 한 발 물러서 타협하라고 촉구했다. 자기 조합원들이 몇 달째 투쟁하는데 지원도 않고 방관만 하더니, 이제 와서 사실상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도 양보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청와대가 책임지고 1500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비정규직 투쟁 비난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정규직 노조)은 9월 28일 청와대 앞



김천 도로공사 본사 점거농성장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문제인의 실체를 드러내는 투쟁 선포에 서 있다

에서 민주노총 “불법점거”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동료들의 투쟁에 지지는 하지 못할 망정, 이 투쟁을 비난하며 사측에게나 이익이 될 일에 앞장 선 것이다.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노사전협의 회 “합의정신을 존중한다”면서 점거를 비난한다.(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이 합의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앞서 봤듯이 그 “합의”는 결코 노동자들의 진정한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다.

더구나 정규직들이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투쟁을 비난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정부와 도로공사에 맞서는 힘을 약화시킬 것이다. 정부와 사측이 정

규직의 정당한 투쟁을 ‘기득권’ 지키기라며 매도하기도 쉬울 것이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정규직 노조 지도부와 노동자 전체를 싸잡아 “귀족 노동자”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 진실이 아닐 뿐 아니라 무엇보다 전술적으로 현명한 대처가 아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을 싸잡아 비난하기보다 이들을 향해 투쟁의 정당성과 연대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이끄는 비난 대열 내에 균열을 만들고 일부라도 투쟁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이로운 것이다.

양효영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투쟁

“고용 질 개선”했다고 사기치는 철도공사

9월 들어 철도 자회사 노동자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승무 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9월 11~16일 파업을 한 데 이어, 9월 26~28일 여객 매표와 고객상담, 역 시설물 관리, KTX특송 업무 등을 담당하는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지난해 철도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지만, 이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자회사 직원 중 공사와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근속 수준이 같은 공사 노동자 임금의 “80퍼센트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합의했지만, 이는 무시되고 있다.

그래서 자회사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회사 노동자들의 임금은 철도공사 정규직 대비 40~45퍼센트 수준이다. 10년을 일해도 임금(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고 철도공사가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실정이다. 철도공사가 위탁비를 줄이려 온갖 꼼수를 부려 연차나 퇴직금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누더기 침구류와 불안정한 숙소를 제공하는 비인간적 처사도 벌어진다. 인력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것이 “고용의 질 개선”을 이뤘다고 자화자찬하며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한다는 철도공사의 민낯이다.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문재인 정부의 자회사 고용정책의 문제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불안 해소만 되도 어디냐고 말하면서 자회사 고용과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은 감수하라는 식이다.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이다.

또 정규직화 요구가 공정성을 무시

하는 특혜라도 되는 양 말하며 노동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그러나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의 공정성 잣대가 얼마나 위선인가를 보여 줬다. 조국 사태로 계급분단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에서 보듯, 이 사회는 출발선부터 불평등하다.

이런 열악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완전히 정당하다.

강경한 사측에 맞서 승리를 거두려면

철도공사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에 완강히 맞서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벌어진 코레일관광개발 파업 때도 철도공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했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 때 파업해 사측을 압박하려 한 코레일관광개발 노조의 계획은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노조(정규직) 집행부가 대체인력 저지에 나서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 조합원들에게 대체 업무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을 뿐, 비조합원이나 학생 등 일반생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것을 그냥 방치해 대체인력 거부 지침의 효과가 없었다. 철도노조 집행부가 자회사 노조 공동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대체인력 저지에도 적극 나섰다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파업의 당사자인 코레일관광개발지부도 대체인력을 막지는 않았다. 투쟁 경험이 거의 없는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이 강력한 정규직 노조의 지원 없이 대체인력 저지에 나서기는 쉽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럼에도 철도노조의 정규직 활동가들과 함께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체인력 저지를 호소하는 활동을 했다면 파업 효과를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 심화를 이용해 투쟁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양보를 얻어 내는 기회로 삼기보다 우파 득세를

우려해 정부 비판을 삼가거나 맞서기를 회피하는 태도가 노동운동 내에서 적지 않다. 상당수 노조 지도자들의 이런 태도 때문에 최근 노동자 투쟁들이 파편화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배자들의 양보를 얻어 내려면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 효과가 떨어지는 파업이 반복되면 노동자들 사이에서 사기 저하와 냉소가 자랄 수 있다.

물론 철도와 같은 주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은 경제적 효과(파괴력)가 떨어져도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다. 2013년 12월이나 2016년 10~11월 철도 파업이 박근혜 정부를 심각한 위기로 빠뜨렸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파업의 경제적 효과가 결합되면 이런 정치적 효과는 훨씬 강력해지고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정원

9월 28일 전국 영어회화전문강사 결의대회

정부는 영전강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책임 져라

정원석 전교조 조합원

9월 28일 전국의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고용 안정(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 개선(전국적으로 교육공무직과 동일한 처우 적용)이 핵심 요구다.

영전강들은 자칭 ‘춧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다. 문재인은 대선 때 영전강의 고용 안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영전강을 비롯한 비정규직 교·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매몰차게 제외해 버렸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고등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자신들의 고용과 처지가 불안해지는 것을 보면서 영전강 노동자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영전강은 학교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 불안이 매우 심각한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매년 재계약을 위해 평가를 받고 4년마다 신규 채용에 응해야 한다. 지난 6년간 절반이 넘는 영전강이 해고됐다. 몇 년을 일해도 월급은 항상 “새내기 월급”이라, 지난 10년간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실질 임금은 되레 줄었다.

강사직군이라는 이유로 교원 대우도 못 받지만 교육공무직으로도 인정받지 못해,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교통보조비 등의 수당과 상여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서야 겨우 급식비와 명절상여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울산·제주·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은 이마저도 못 받는 형편이다. 단체협약도 적용받지 못하고, 고용 불안 때문에 병가나 육아휴직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

영전강이 이렇게 열악한 처지로 내몰린 것은 잘못된 제도와 무책임한 정부 행정 탓이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영전강에 관한 특별교부금을 아무런 대책 없이 중단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들린다. 교육부의 예산 삭감은 가뜩이나 불안한 영전강의 고용을 더한층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스포츠강사 인건비를 지원해 오던 문화체육부가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서 스포츠강사가 대량해고를 겪은 바 있다. 정부는 영전강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진보’ 교육감

‘진보’ 교육감들도 영전강의 기대와 바람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2017년 6월 “4년 이상 근무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무기계약직에 해당한다”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교육감들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핑계 대며 무기계약직 전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내 직군·직종 간 차별을 조장하며 처우 개선도 외면해 왔다. 최근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자신이 약속했던 명절상여금(100만 원)조차 못 내놓겠다고 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제도나 법령, 예산 핑계를 대지만 교육감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조차 하



영전강 투쟁은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드는 투쟁의 중요한 일부다 2017년 7월 28일 대량 해고에 항의하는 영전강 기자회견

지 않고 있다. 불충분하지만 충북과 경남 교육청은 영전강을 교육공무직으로 인정해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단협을 적용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영전강 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교육청의 자발적 조처는 아니었지만 말이다. 설사 제도와 법령에 걸림돌이 있더라도, 불의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진보’ 교육감을 뽑을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정규직 교사들의 연대

역대 정부는 정규 교원을 늘이지 않고 비정규직 강사들(산학겸임교사, 영전강, 스포츠강사, 다문화언어강사, 예술강사 등)을 늘려 왔다. 비용을 절감하고 구조조정과 노동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영전강의 투쟁은 이러한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드는 투쟁의 중요한 일부다.

안타깝게도 영전강 제도의 문제점을 이유로 영전강의 고용 안정을 지지하지 않는 정규 교사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영전강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희생자일 뿐 그 정책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앞으로도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 비정규직 강사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 양산을 막고 비정규직 제도를 폐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재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예비 교사와의 형평성’ 운운하면서 비정규직 교·강사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 신규 교사 임용을 점차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교원 수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내놔다. 영전강과 스포츠강사가 지속적으로 해고되는 동안 초중등 정규 교원 수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교·강사와 예비교사, 정규직 교사를 이간질하면서 각개격파해 온 것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를 핑계로 학급 수와 교사 수를 줄이고 있다. 교육 긴축은 정규직 교사의 처지도 점점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정부는 교육노동자들 사이의 분열을 이용해 약한 고리부터 공격하지만, 그 칼날의 끝은 정규직 교사를 향해 있다.

따라서 정규직 교사들은 자신들의 조건을 방어하고 교육의 질을 지키기 위해서 비정규직 교·강사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한다. 학교노동자들이 단결하면 사용자들의 공세에 더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

서울대 생협노조, 청소·기계노조 공동 집회

학교 당국의 최저 대우에 맞서 연대하다

“열악한 노동 환경 기계도 망가진 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이 노동자들의 찌렁찌렁한 구호 소리로 가득 찼다.

9월 24일(화) 낮 11시 30분 서울대학교 청소·경비, 기계·전기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명절 상여비 지급,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이 서울대를 바꾼다”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에서 일하는 노동자 350여 명과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학내외 학생들이 모였다.

서울대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청소 노동자 휴게실 사망 사건이 벌어진 후, 서울대 당국은 노동자·학생의 항의와 사회적 비판에 밀려 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을 일부 약속했다. 하지만 임금과 처우 개선은 불충분한 안만 내놓고 있다.

노동자들은 나머지 휴게실도 개선하라고 주장하며 임금 인상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내 직영식당, 카페, 매점 등에서 일하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

조합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휴게실 등 개선을 요구하며 9월 19일 파업에 돌입했고 현재까지도 호트러집 없이 파업을 진행 중이다.

청소·경비, 기계·전기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명절 상여비 지급,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지난해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처우는 용역 시절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일류 대학’이라는 국립 서울대학교에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본급 인상을 위해 싸워야 하는 현실이 정말이지 분노스럽다고 토로한다.

노동자들은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매일 같이 굴러가게 하는 사람들”이라며 “서울대 당국이 책임지고, 응답해야 한다”고 함께 목소리 높였다. 직종과 요구는 달라도 공통의 사용자와 싸우는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집회를 한 것은 매우 뜻깊다. 학교 당국은 늘 여러 직종의 노동자들을 분열시켜서 각개격파하려 해 왔다.

노동자들은 각자의 요구가 담긴 현수

막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가 1시간 넘게 진행됐는데도 노동자들은 땀말을 높게 들고 눈을 빛내며 자리를 지켰다. 주요 언론사들이 취재를 위해 많이 참석했는데, 서울대 노동자 투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 시설분회 최분조 분회장이 힘찬 발언으로 집회 포문을 열었다. “2018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여기 모인 노동자들과 힘차게 투쟁하겠다.”

열악한 현실

파업 중인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의 이창수 부지부장은 생협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생생히 폭로했다. “25년 전 서울대에 취직해 처음 출근할 때 친구들이 ‘서울대는 시설도 잘 돼 있지?’ 하고 물었는데, 할 말이 없었다. … 25년이 지난 지금, 그 때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없다.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는 좁은 휴게실, 샤워장과 냉방 시설이 알맞게 갖춰지지 않은 주방 등은 여전하다.”

노동자들이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당 여자 조리원 샤워실을 강력히 요구했더니, 황당하게도 서울대 당국은 “주방한 귀퉁이에 샤워 폭지 하나 설치해 주고 샤워장 만들어 줬다”고 한다. 이창수 부지부장은 “우리 한 목소리를 만들어 학교를 변화시키자”고 결의를 다졌다.

서울대 학생들도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며 집회에 참가했다.

서울대 도정근 총학생회장은 “파업이 지속되면 학생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만큼 노동자들의 일이 중요하다는 뜻일 것”이라며 “학생들도 [학교] 구성원으로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지지한다”고 했다. 또, “학교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학교 당국은] 노동자들의 처우를 직시하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는 발언에 노동자들은 힘찬 박수와 큰 함성으로 호응했다.

서울대학교 중앙 몸짓패 골패 학생들은 몸짓으로 연대했다. 노동자들은 함박 웃음과 함께 박수를 치며 학생들의 몸짓을 함께했다.

그 외에도 주무열 관악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신장식 관악을 위원장,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임성규 센터장 등이 발언했다. 서울대 노동자 투쟁에 대한 시민 사회, 지역 사회의 연대가 넓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 기계·전기분회 임민형 분회장은 식발하고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천막 농성과 단식을 시작했다.

최분조 분회장은 “학교 당국의 분열 [시도]에 속지 말고 … 모든 게 관철될 때까지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행정관 앞 천막 농성도 3개 노조가 함께 이어 갈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노동자 투쟁에 학생들이 도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이지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임금 억제, 차별 정당화 직무급제 반대한다

이정원

9월 28일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이 대정부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선포하는 집회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공공기관 운영에서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취한 실질적인 조처는 찾아보기 힘들다. 집권 첫째 성과 연봉제와 쉬운 해고 지침을 폐기했지만 이는 박근혜 퇴진 운동의 여파에 따른 것이었다. 2016년 하반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 특히 철도 파업이 이 운동을 촉발하는 구실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민자투자 활성화 정책을 내놓아 외주화와 민영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는 공공성 강화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인력 부족과 정규직 전환 ‘제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81만 개 확충을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주요 공공기관에는 여전히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그나마 인력이 늘었다는 철도공사에서조차 실제 인력이 정원에 미달한다. 서울지하철은 인력 총원 없이 교대제를 개편해 노동강도만 상당히 강화됐다.

인천공항에서는 인력 총원 없이 주 52시간에 맞추기 위해 변칙적인 교대제를 도입했고, 이는 노동자들의 생활 사이클을 더 엉망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이 대폭 삭감된 노동자들도 수도룩하다.

더구나 정부는 인력 확충의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노동자끼리 임금을 나누라는) ‘탄력정원제’를 대책



직무급제는 차별 해소나 공정성과 무관하다 올해 7월 직무성과급 반대 양대노총 결의대회

이랍시고 내놔 반발을 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대표적인 실패작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지만, 진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나마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노동자들도 실제로는 저임금 무기계약직이었고, 많은 노동자들은 용역과 다를 바 없는 자회사로 고용되거나 압박을 받고 있다.

고약하게도 정부는 이 전환 비용도 정규직 노동자 양보로 메우도록 해 노동자들 사이를 이간질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정규직 노조 지도자들이 정규직화를 반대하거나 자회사 방안 수용을 압박한 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정부 정책이 이를 부추기는 효과를 냈지만

말이다.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무시

문재인 정부가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를 거부하는 것도 노동자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퇴직을 앞둔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 신규채용된 노동자 인건비를 대도록 했다. 정년 연장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 때문에 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퇴직 전 2년 동안 임금 총액의 30~40퍼센트나 삭감됐다. 사측만 득을 본 셈이다.

더구나 시간이 갈수록 임금피크제 대상 노동자의 임금 삭감분으로는 신규 노동자의 임금을 메우기도 어려워졌다. 그래서 공공기관 사용자들은 다른 노동자들까지 끌어들여 전체 노동

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해 부족분을 메우려 하고 있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지난해부터 수십억 원의 부족분이 발생해 임금 억제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이곳은 애초 정년이 60세여서 정년이 연장되지도 않았는데 임금만 깎였다.

애당초 이 제도의 설계 자체가 전체 노동자의 임금 억제를 노린 것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악에 속도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매뉴얼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는 8월 21일 경제장관회의, 9월 17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거듭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직무급제는 이른바 ‘직무 가치’에 따른 임금의 ‘공정성’을 명분으로,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제 임금체계를 해체하거나 대폭 약화시키는 것, 즉 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기사 : ‘직무급제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260호)

경사노위 위원장 문성현은 호봉제 폐지와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을 이렇게 말했다. “우리 노동시장 경직성의 주원인이 호봉제 임금체계다. ...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격차 해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말은 정규직 임금 양보를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한 것일 뿐이다. 심지어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들의 임금 체계로 제시한 ‘표준임금체계’(직무급제)가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내용인 것을 보면 최하층을 끌어올리는 것조차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직무에 따라 “능력”, “성과”와 연계해 임금을 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방식의 임금 차등을 합리화하는 것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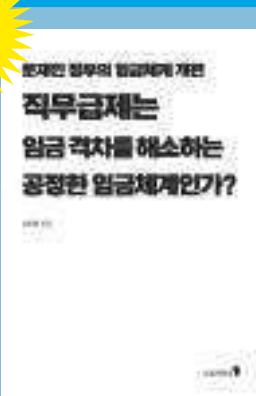
정부는 곧 출범하는 2기 경사노위에서 공공기관 직무급제 합의를 끌어내려는 구상이다.

그러나 그동안 탄력근로제 확대, 노조법 개악 등에 관한 논의에서도 그랬듯이 이미 정부의 답은 정해져 있다. 경사노위는 직무급제를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테이블이 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사회적 대화에 미련을 두기보다 정부의 임금체계 개악 의도를 폭로하며 저지 투쟁 조직에 힘을 쏟아야 한다.

노조 교섭으로 직무급제 폐해 완화는 불안정하다

추천
소책자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김하영 지음 | 2,000원 | 42쪽 | 노동자연대

최근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다루는 경사노위 논의(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에 참관하려 해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특히 이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방침을 어기는 것이어서 만만찮은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두 노조 지도부는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참관 추진을 철회했다.

대신 두 노조가 속한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재부에 게 ‘노정 직접교섭에서 임금제도(임금결정 방식, 임금 수준, 임금체계 등)를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는 아직 이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노정 교섭이 성사되지 않으면, 경사노위에 종속된 모종의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보자는 제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미 양대노총 공대위에서는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경사노위에 직접 참가·참관하지는 않지만 우회적으로 사실상 그 논의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도 있다.

그러나 우회적일지라도 경사노위나 그와 유사한 사회적 대화기구에 문을 열어 뒤흔드는 안 된다. 그것은 결코 개혁의 통로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개악을 정당화하고 양보 압박만 가할 공산이 크다.

노정 교섭이 성사되더라도, 공공운수노조 등이 임금체계 개편에 어떤 입장으로 대응할지가 중요하다.

지금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일방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다만 직무급제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우려된다.

가령, 일부 사람들은 직무성과급제

같은 특정 유형은 반대하면서도 직무급제 자체에는 진보적 요소가 있다고 본다. 공공운수노조 지도자들 중에는 산별교섭과 노조의 개입이 보장되면 직무급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직무급제를 반대만 할 수 없다거나, 그것이 임금 격차를 해소할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은 직무급을 기본으로 하되, 노사공동위 설치로 노조가 직무 평가에 개입하고, 직무급 임금체계에 근속급 요소를 반영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조의 직무 평가 개입을 통해 사용자의 자의적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그런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공산이 크다. 자본주의 하에서 경영진과 관

리자의 업무가 높은 직무 가치를 인정받고 고된 육체 노동을 하는 업무가 저평가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기 일쑤이다.

무엇보다 노조가 직무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른 임금 차등을 결정하는데 참여하게 되면, 자칫 ‘합리적(정당한) 차별’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도치 않게 노동자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계급적 단결에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일부 사람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일부(무기계약직 전환자)에 적용되고 있는 표준임금체계를 일단 도입해 개선하자는 주장도 편다. 그렇게 일단 임금을 표준화하고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단점은 이후 투쟁해서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노동자들의 삶이 달라

있는 중요한 조건을 도외시하면, 표준임금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할 투쟁을 조직하기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임금 개악과 직무급제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투쟁을 조직해 가야 한다. 임금 개악을 저지해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임금 격차를 줄여 나갈 기회도 생길 수 있다.